

경비대가 벌건 대낮 도로변에서 노동자들을 때렸다?

금속노조·노동시민단체, 현대차 사측 폭력 규탄 기자회견 열어... “경찰 방조 책임 물을 것”

“구사대 폭력 웬 말. 현대차 정의선은 사과하라” “현대차 폭력 방관한 울산 경찰 규탄한다”

금속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투쟁문화제에서 발생한 현대차 사측의 폭력 행사를 규탄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인 안미숙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그동안 현대차 하청업체를 폐업하거나 합치면 고용승계가 관례였지만, 이수기업은 달랐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했고 고용승계는 없었다”라며 “고용을 책임지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로 지난 9월 폐업했다. 현대차 하청업체들이 5년마다 계약 연장하는 것과 달리 이수기업은 3년 만에 갑자기 폐업을 통보했다. 이수기업 노동자 모두 다른

업체로의 고용승계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원청이 불법파견 범죄를 숨기려 이수기업을 기획 폐업했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폭력 사태는 18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이수기업 집단해고 200일 투쟁문화제에서 벌어졌다. 문화제 도중 현대차 사측 경비대 500여 명이 난입했다. 경비대는 천막 등 집회 물품을 빼앗아 갔고 이를 막는 노동자들에 폭력을 행사했다.

경비대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경비대는 여성 참가자들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한 여성은 주먹으로 두 번 얻어맞아 기절했다.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경비대 폭력은 퇴근 선전전 때도 계속됐다.

허원 노조 부위원장은 경찰 방조를 지적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현대차 사측 폭력은 18일 투쟁문화제 한 번이 아니다. 이수기업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이 이미 여러 차례 구사대 폭력으로 다쳤다”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현대차 자본의 폭력을 분명히 봤고, 이수라장이 벌어졌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허원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현대자동차 사병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원 부위원장은 “글로벌 현대차가 21세기에 여전히 구시대적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노스럽지만, 경찰 역시 다를 게 하나 없다”라며 “이번 폭력 사건에서의 경찰 방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지연된 입법에 정의를 실현하라”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국회~한화 고공농성장 23km 자전거 행진

금속 노동자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23km를 행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4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을 핵심 구호로 진행됐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해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박래균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차례로 발언하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반노동 폭주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11 총파업은 단순한 하루짜리 투쟁이 아니다. 금속노조가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도 나서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없이 10년을 싸우고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윤석열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대로 개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노동자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이 하청·비정규직에게는 신기루와 같았다”며 “20년 넘게 외쳐온 존재의 선언을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

았다”며 “차기 권력은 바로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 운동은 단지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사회적 대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금속노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는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의 연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국회에서 출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외치며 여의도 LG타워, 홍대 애플매장, 신촌, 광화문, 시청을 거쳐 장교동 한화 고공 농성장까지 23km 자전거 행진을 이어갔다.

